

일 자리

≡ 차례 ≡

1. 일자리 창출은 복지를 위한 전략
2. 일자리 창출의 근본 해법은 사람의 능력과 기술의 향상
3.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4. 고용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1. 일자리 창출은 복지를 위한 전략

□ 양극화 해소의 핵심은 일자리

참여정부 들어와서 잘했다 못했다 여러 가지 말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양극화가 좀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제일 낮은 사람과 제일 높은 사람 사이의 차이가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상위계층의 성장이 빨리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봉이 높은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져 버렸습니다. 앞서 가는 사람이 빨리 가 버리니까 제걸음을 가는 사람의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이 지금 양극화의 현실입니다. 한국사회가 그만큼 속도 있게 나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이든 이걸 해결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일자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일자리를 가지면 격차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부도 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나빠진 때가 1998년입니다.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6.7%입니다. 그때 실업자가 150만까지 나왔고, 빈부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에 가계부채 위기가 왔을 때 신용불량자들이 384만 명까지 올라갔습니다. 경제의 위기는 일자리의 붕괴로 인해 양극화의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재래시장 정책 성과 보고회에서 2007. 6. 27)

□ 일자리 창출은 성장과 경쟁력의 최종 목표

노사관계도 상호존중, 공존하는 자세를 발휘하는 등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중소기업도 항상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과거 도움을 받았던 방식 그대로 간다면 지원하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동북아 경제의 중심, 2만 달러 시대 등과 관련해서 상호관계가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성장과 경쟁력의 최종 목표입니다. 정부도 기존 정책을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재평가 하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생각입니다. 사회협약은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꼭 실천할 생각입니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 성과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도 밀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대책과 사회협약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이 방향으로 모두 매진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지도자 회의에서 2004. 2. 19)

□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은 번영 복지를 위한 총체적 전략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은 매우 소중한 결실로 한국이 번영하고 복지를 나누기 위한 총체적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충실히 이행하고 하나하나 이뤄 나가면 번영·복지와 함께 한 단계 수준 높은 사회로 갈 것입니다.

이 협약이 국내외의 투자자들에게 좋은 신호가 되고 전 국민에게 희망의

소리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대화가 끊어지려고 할 때 정부가 적극 나서 중재할 것이고 결실을 거둘 때마다 정부도 할 일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사·정 사이의 합의사항은 작은 일이라도 정부가 반드시 존중하겠습니다.

이 문제 이행에 어려움이 있고 반발에 부딪힐 것입니다. 지도자의 덕목은 현실을 그대로 구성원에게 말하고 반발이 있더라도 단호히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큰 짐을 지워 줄 것으로 믿습니다.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조인식에서 2004. 2. 10)

□ 공공·사회 서비스 확대는 일자리 창출과 국민복지 향상과 직결

중소기업, 서비스업, 공공 서비스, 사회 서비스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릴 것입니다. 일자리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보육, 간병, 식품안전, 치안, 재해예방, 환경관리 등 국민복지 향상에 직결되는 공공서비스, 사회 서비스를 늘려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새해 예산안에서 사회 서비스 일자리 예산이 야당의 요구로 대폭 삭감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사회 서비스 일자리는 선제적 투자의 의미가 있으며,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멀리 내다보면 국가 성공의 기반이 됩니다. 보육·교육·치안·등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이며, 특히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공급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의지를 가지고 공급을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이 사업은 국민들의 잠재적 수요가 있었음에도 그동안 해 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참여정부가 새롭게 인식하고 추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참여정부 들어 획기적으로 확충된 보육 서비스는 제대로 된 교육의 출발점이며, 보육·교육의 성공 없이 국가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GDP 중 재정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일본 37%, 미국 36%에 비해 우리나라는 28%로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참여정부 들어 정부의 공공사회 서비스 지출 비율을 20%에서 29%로 늘리고 지방자치단체 일반교부금 중 사회복지 분야 비율도 31%에서 36%까지 확대하였는데, 앞으로 재원 배분 방안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중심으로 지역단위의 특화된 복지수요를 고려한 차등적 배분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2007년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보고회에서 2007. 2. 22)

□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의 완결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IMF 외환위기 이후 막대한 실업대책 예산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고용지원 서비스 인프라 구축은 미흡합니다. 고속 성장을 마감하고 일자리, 산업구조 등 경제체질이 바뀌는 상황에서 국가적 인프라로서의 고용지원 서비스 구축은 필수적이며, 고령화 시대 등을 대비한 국가 역량 지표의 하나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6개월간의 고용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합니다. 이를 시스템화, 제도화하여 조속한 시일 안에 국가 인프라로 확고히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량이 뒷받침되는 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인적·물적 자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고용지원 서비스사업에 대한 명칭도 새로이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의 완결을 위해서는 지역단위에서 고용안정센터와 지자체 등 복지전달체계와의 유기적인 연계와 업무·정보공유가 필수적입니다. 중장기 과제로서 고용과 복지 시스템 연계 방안도 검토해 주길 당부합니다.

(고용지원 서비스 선진화 보고회에서 2005. 12. 20)

2. 일자리 창출의 근본 해법은 사람의 능력과 기술의 향상

□ 교육을 통한 직업능력 향상을 정부가 뒷받침할 것

고용지원 서비스나 전 국민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를 새롭게 제공하는 시스

템은 빠른 속도로 갖춰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마칠 때까지는 전 국민이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 서비스와 직업 알선 서비스를 확실히 갖춰 놓겠습니다. 직장을 쉽게 옮길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직장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을 통해 직업능력 향상시키는 쪽으로 정부가 뒷받침할 것입니다.

개인 창업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지금은 그 상권에 인구가 얼마나 되고 이웃에 동종 업체가 몇 개 있는지까지 조사해서 정부에서 통계를 바탕으로 자료 제공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게 시장 정보만큼 빠를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이나 사업을 오래한 사람들과는 달리 처음 창업하려는 사람은 시장 정보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부 정보가 앞선다는 판단 하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 가면 결국에는 전 국민의 역량이 전반적으로 앞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이집트 동포 간담회에서 2006. 3. 6)

□ 일자리 만들기의 근본 해법은 사람의 능력, 기술, 향상

양극화 양극화 하는데, 양극화 대책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핵심은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 대책 가운데서도 일자리가 핵심이고, 일단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나머지 부차적인 정책도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일자리가 이 시기에 제일 중요한 정책이자 과제입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전체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전체 경제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시장을 넓혀 나간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회적 영역의 일자리가 많이 모자라니까 복지, 봉사, 공동 서비스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고급의 일자리로는 금융, 컨설팅, 기업 지원의 지적 서비스 등의 일자리가 나오지만 한꺼번에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일 자리를 만드는 방법은 경제정책 활성화 방법이 있지만 근본적인 해답은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일을 잘 할 수 있는 능력, 경쟁력 있는 기술, 즉 기술

훈련이 핵심입니다. 기술 있는 사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학생 및 학교 관계자 오찬 간담회에서 2006. 4. 14)

□ 일류인력 양성, 기회균등 모두 성공해야 인재강국

인적자원이 국가경쟁력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내용적으로 강조하는 데는 한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일류 인력만이 국가경쟁력이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그쪽은 할 만큼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인적자원 양성에 있어서 기회균등이 더 중요하다, 그 사람들을 함께 끌어안고 가지 않으면 총체적인 국가 인적자원은 결코 성장할 수 없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기회균등을 강조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실제로 우리가 인적자원 정책을 수행해 보면 어디에서 경계가 갈라지는지 분명치 않습니다. 연속되어 있는 것이고, 또 어느 나라도 어느 한 가지만 강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두 가지 모두 성공할 때라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적자원의 강국, 그야말로 인재강국이 되는 것이죠.

인재라는 개념을 천재, 수재 말고 그냥 보통 사람들의 재능까지 다 포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두 가지를 통합시키지 않으면 오히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인적자원까지 함께 양성하는 정책으로 가지 않으면 사회통합이 궁극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사회가 20, 30년 지나가면 심각한 균열과 갈등 때문에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 사회 전체의 경쟁력이 무너지거나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될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고 두 개념을 통합시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국가인적자원위 회의에서 2007. 7. 27)

□ 학계, 산업계, 정부가 함께 수급 불일치 해법 모색해야

정부가 대학교육의 방향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할 수 있는가 라는 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부도 지금 답답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시하고 요구하는 것으로만 보지 말았으면 합니다. 최종적으로 대학교육은 자율이지만, 대학교육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은 정부에게 묻고 있습니다. 또 어느 나라에서도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교육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섭하나 안하나 이런 방법이 아니라, 주거나 받거나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해 가면서 좋은 답을 찾아냅시다.

수급의 불일치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됩니다. 정부 아니라도 대학은 이미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아마 교육의 공급자가 갑의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면 점차 을의 위치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은 정부 아니라도 스스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거기에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해 방향 전환에 도움을 주고, 재정과 같은 사안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협력 관계로 풀어 나가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인적자원 면에서 풀어 가는 데 있어서 하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기회균등의 문제입니다. 미래를 멀리 내다보는 교육 전략이고 기회균등의 전략입니다. 유아시기부터, 초등학교부터 예방적 투자 또는 선제적 투자라는 관점의 교육정책이 많이 들어 있었는데, 이것이 매우 바람직한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제1회 국가인적자원위 회의에서 2007. 7. 27)

3.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 교육과 의료 서비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적 산업

대학교육과 의료 서비스는 고급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산업적 측면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일자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개방하고 서로 경쟁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질 높은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전략적 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육

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학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산업으로 발전시켜서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돈을 쓰게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돈을 쓰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정부는 국민에 대한 보편적인 서비스, 공공 서비스는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할 것입니다.

(신년연설에서 2006. 1. 18)

□ 문화·관광·레저와 같은 서비스 산업도 다양하게 육성하고 고급화해야

이를 위해 정부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서남해안 개발사업, 부산 영상도시, 광주 문화중심도시, 농촌관광의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골프와 같은 고급 서비스에 대한 우리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사치와 소비라고 비난할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소비무대가 세계화됐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이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 가계 소비 100만원 중에서 4만 5,000원을 해외에서 쓰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 일부라도 국내에서 쓰게 하고, 또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돈을 쓰도록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는 또 있습니다. 보육, 간병, 교통, 치안, 식품안전, 재해예방, 환경관리와 같은 말하자면 정부가 하는 일 들입니다. 이와 같은 전통적으로 정부가 해 왔던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사회적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를 많이 늘려 왔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의 두 배 가까운 13만 개의 일자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는 이 분야를 사회적 일자리를 일시적인 실업대책 수준에서 공공근로 형태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이 사회적 서비스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공공 서비스 분야 종사자는 선진국의 6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작은 정부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 분야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 사회 서비스 일자리 사업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생활의 수단이자 그 자체가 자아실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용 없는 성장 - 취업계수 1990년 56명, 2005년 32명 - 과 일자리의 양극화가 문제입니다. 고학력 실업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늘릴 것입니다. 경제 활성화, 일자리 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일자리의 87%를 차지합니다. 1997년 이후 대기업 일자리는 122만 개가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은 216만 개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5년간 제조업 일자리는 매년 4만 개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은 40만 개 이상 증가했습니다.

공공 서비스, 사회 서비스를 늘려야 합니다. 보육, 간병, 식품안전, 치안, 재해예방, 환경관리 등 국민복지 향상에 직결되는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4년간 사회 서비스 일자리 사업 예산을 네 배 가까이 늘려왔습니다. 올해에도 1조 3,000억 원을 투입해서 지속적인 일자리 20만 개를 만들어 낼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 제정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적극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여성·아동·청소년)에서 2007. 3. 13)

□ 청년실업, 금방 해결 어렵지만 착실히 정책 진행하면 해소될 것

청년실업 또한 우리 참여정부의 핵심 과제입니다. 모두들 고통 받고 있고 고심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핵심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금방 해결되진 않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만 착실히 진행해 가면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곧 우리 한국의 청년 인력 부족사태가 오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해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당장 닥친 문제는 당장 닥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우리가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정부가 할 일은 다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또 기업과 학교 그리고 해당되는 당사자들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수요·공급이 안 맞은 데서부터 비롯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급과잉입니다. 대학교 진학률이 83%에 갔지요? 조금 전에 일본 말씀 하셨습니다만, 일본의 대학 진학률은 48%입니다. 미국의 대학 진학률은 67% 정도입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83%니까 공급 과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mbn 특별회견에서 2007. 5. 21)

□ 중소기업 일자리 활성화시켜야, 약 20만 명 일손 부족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말하자면 300인 이하의 기업에서 모자라는 사람이 19만 5,000명이거든요. 약 20만 명 부족합니다. 지금 35만명 실업자가 있는데, 19만 명이 부족하니까 수요·공급의 불일치지요. 실제 있는 일자리와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의 눈높이가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중소기업에 안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눈높이를 좀 조절해야 되는 것이지요.

기업에서는 대학교 졸업한 사람의 인력으로서의 만족도가 얼마나? 대기업은 80% 불만이라는 것이고요, 중소기업도 약 55% 불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심각한 불일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바로 직장에 쓸 수 있는 교육에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여기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대학 교육도 변화시켜 나가고, 또 학생들이 취업 경험을 통해서 눈높이를 조절할 수 있게도 하고, 정부에서 실제 취업 알선이나 새로운 교육 훈련도 제공하고, 요즘은 이제 초·중등학교 때부터 직업관에 대한 교육을 하는 등의 중장기 계획을 여러 가지로 세워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의 체질이 강건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계속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mbn 특별회견에서 2007. 5. 21)

중소기업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수출의 효과가 내수로 확산되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04년 7월부터 중소기업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해 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실태를 철저히 조사·분석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구태의연한 지원방식을 과감하게 털어 버리고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말하자면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정책의 내용을 완전히 바꿔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 가면 이번에는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대기업들도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술지원, 인력지원, 자금지원에 모범적인 협력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스스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고 벤처기업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는 중소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신년연설에서 2006. 1. 18)

□ 일자리 창출 위해 서비스업 일자리에 집중해야

서비스 산업도 매우 중요합니다. 서비스 산업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고학력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고급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학진학률이 80%를 넘어섰습니다. 고급인력의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금융, 물류, 법률, 회계, R&D, 컨설팅과 같은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일부 회의적인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금융중심, 물류중심, 전문대학원 정책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년연설에서 2006. 1. 18)

일자리 정책을 잠시 소개해 드리면 중소기업 육성, 서비스 산업, 이전에 없던 새로운 영역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발굴하고 늘리기 위해서 집요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급 일자리를 위해서 금융, 물류, 기업 지원 서비스 그리고 문화, 산업, 환경, 건강, 교육의 산업화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 건강과 교육의 산업화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복지 근본주의를 주창하는 사람들 때문에 진전이 매우 더딥니다. 공공 서비스는 공공 서비스대로 확충하되 산업적 영역에서 국가 간 경쟁을 할 곳은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의 산업적·시장적 원리의 도입을 강력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좀 지지부진하고 있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평가포럼 월례강연에서 2007. 6. 2)

지금 국회에 막바지에 가 있는 「자본시장통합법」 등을 통해서, 한국 금융 시장이 저는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물류부분도 상당히 성공하고 있고요. 이것이 고급 일자리 전략입니다. 그런 쪽으로 산업을 늘리면서도 한 쪽으로는 우리가 소위 사회적 서비스라고 하는 그 분야의 일자리를 쪽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정책 성과 보고회에서 2007. 6. 27)

4. 고용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 고용안정 시스템, 제대로 만들어야

우리가 제일 힘쓰고 있는 것은 고용안정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이제는 실업이 생깁니다. 실업이 안 생기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실업을 감당해서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게 도와줄 최종적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합니다.

그래서 고용안정 시스템 하나만은 정말 제대로 만들어 보자, OECD 적어도 중간 수준 이상은 한번 해 보자, 최고 수준으로 한번 가 보자, 이런 욕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우리가 어려운 것이 비정규직입니다. 골프장,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그리고 레미콘 노동자들을 법원에서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제도의 공백 속에서 많은 분쟁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해 보자고 노·사·정 테이블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사협력유공자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2005. 6. 24)

□ 국가 서비스는 더 확대해 나가야

직업 상담원에 대한 자질과 전문성의 향상이나 교육 훈련 등의 많은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든지, 그것이 여러 가지 체제상 문제가 있으면 공단을 만들든지 해서 확실하게 안정된 일자리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고용 사정이나 경제가 좋아지더라도 인력을 줄일 이유가 없습니다. 국가 서비스를 계속 확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을 더 줄일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임시직이나 계약직으로 하지 마시고요. 인력을 늘려야 되는 부분은 늘리겠습니다. 그러나 인력을 한꺼번에 마구 총원하면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속도로 해 나갔으면 합니다.

정말 열정 있는 사람들만 골라서 한다고 생각하면서 확실하게 서비스를 늘려 가도록 하십시오. 지금 예산이 쓰이는 것도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비교하면 10분의 1도 채 안 쓰고 있습니다. 매우 빈약합니다. 예산 투입하는 것도 빈약하니까 충분히 쓰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고용안정센터에서 2006. 4. 14)

□ 고용지원·사회적 서비스 강화도 민생문제 해결책

교육훈련은 직업알선제도와 함께 결합돼야 합니다. 그래서 고용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직업안내소 식으로 운영하던 것을 지금 고용

지원안내센터를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투자가 지난 날보다 곱절로 바로 바로 늘어나는 수준으로 투자를 늘려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루 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정책적 준비에서부터 교육훈련도 받아야 하고 홍보도 돼서 자연스럽게 사람들도 모이는 이런 다양한 준비과정이 있기 때문에 금방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속도로 가고 있는 것이 고용지원 서비스인데, 이 부분은 본격적으로 참여정부에 와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취임 4주년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2007. 2. 27)

□ 영세 자영업자들까지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포함되도록 해야

자영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시연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어느 업종이 몇 개나 모여 있고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컨설팅을 하는 것입니다. 상담 비용까지 지원해 줍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거쳐서 창업을 하고 그전보다 수입이 높아졌다는 등의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 걱정인 것이 그 사람 잘 되면 옆에 누군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규모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옆집 잘 되면 우리 집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탈출하느냐는 문제가 아주 고민입니다. 그래서 결국 영세 자영업자들까지 노동자로 보고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포섭해서 자영업에서 탈출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서비스업을 제조업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대기업 보다 일자리를 많이 내는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산 고용안정센터에서 2006. 4. 14)

□ 체계적인 고용지원 서비스·직업훈련 시스템 구축해야

그동안 체계적인 고용지원 서비스와 직업훈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적인 투자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고용지원센터 상담원도 공무원 신분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 실업급여사무소 수준에 머물렀던 고용지원

센터가 고용지원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났습니다. 지난 2년 사이에 고용지원 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가 45%, 이를 통해 취업한 사람이 78%나 증가했습니다.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혁신하고 예산을 두 배 가까이 늘려 여기에 참여한 중소기업 근로자가 지난해 84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2002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참여정부는 일을 통한 빈곤 탈출과 예방에 주력했습니다. 국민의 정부 때 부터 시행된 자활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실질적 성과로 정착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차상위 근로빈곤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생계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도를 2009년부터 시행토록 제도화했습니다. 한나라당이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발목을 잡는 바람에 시행 시기가 1년 늦춰졌지만, 이미 선진국들은 1990년대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여성·아동·청소년)에서 2007. 3. 13)

□ ‘고용안정’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 나갈 것

선진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 문화도 달라져야 하지만, 적어도 국민들의 삶이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자유롭거나 아주 낮은 수준으로 안정되어야 합니다.

좋은 사회는 국민소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일자리에 대한 불안이 없고 노후에 대한 불안이 없는 사회가 가장 품질이 높은 사회입니다. 아울러서 젊은 사람들이 미래의 기회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이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의 희망 중에 가장 큰 것이 취직을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지만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안정에 관한 문제가 중요합니다. 국가가 이 부분은 책임지고 관리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직업능력 향상, 교육훈련이라는 것이 당장의 당기 순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모르지만 기업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데 매우 결정적 요소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기회를 갖는 비율이 10:1이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소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한 의지와 자신감이 확고합니다. 적어도 직업안정 서비스, 직업능력개발 서비스, 고용안정 서비스 정책에 관한 한 확실히 성공시킬 수 있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고용지원 서비스 혁신보고회에서 2005. 4. 6)